

06 _ 국내외 언론사의 과학보도 시스템

언론사내 과학보도 전담부서 재정비 시급



글 | 박성철 _ 서강대학교 과학문화아카데미 교수부장 sc0314@sogang.ac.kr

언론 34.4%, 청와대와 정부 22.9%, 과학계 내부 19.8%. 한 언론사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황우석 사태의 책임소재를 묻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황우석 사태’는 한국 언론의 한계와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사태의 진전에 따라 상황은 여러 차례 급반전했지만, 여론은 변함없이 언론을 비난하고 질타했다.

가장 공통된 비판은 이제까지의 ‘황우석 보도’에 대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황우석 교수와 연구팀의 일방적 주장을 기본적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전달하기에 급급한 ‘중계 저널리즘’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언론이 가짜 ‘국익’의 선전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으로까지 이어졌다. 의혹을 보도했던 방송사는 가장 심한 돌팔매를 맞았다. 촛불시위가 이어지고 광고주가 떨어져 나가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또, 다른 언론사는 핵심 연구원과의 단독인터뷰를 성사시켜 주목받으려 했더니, 취재원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 홍역을 치렀다.

‘과학부’ 없는 국내 신문사의 과학담당 기자
 기자를 비롯한 언론인 개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의혹을 보도했던 방송사의 담당PD는 인터뷰 과정에서 취재윤리를 어긴 점이 드러나 궁지에 몰리기도 했다. 기자들의 비전문성도 꾸준히 지적되었다. 기자회견이 끝날 때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질문 하나 제대로 못하는 ‘무식한’ 기자들을 탓하는 댓글들이 이어졌다. 아예 질문지를 미리 작성해서 올려주는 ‘친절한’ 네티즌도 있었다. 모든 국민들이 구체적 대상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언론과 언론인들을 비난하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들 가운데는 한쪽을 편들기 위한 지나친 비난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 한국언론이 안고 있는 고질적 병폐들을 지적한 것들이다. 과학과 관련된 사안의 보도라는 점 때문에 도드라져 드러난 것이다. 그간 ‘과학보도’는 언론현장이나 학계에서 모두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거꾸로 본다면, 이번 사태는 ‘과학보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앞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점들이 나타나게 된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언론사의 최종 상품인 기사의 문제를 지적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생산과정을 점검해보는 것은 당연한 순서이다. 신문사를 예로 들면, 편집국이 바로 기사를 생산해내는 공장이다. 이곳은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등 분야별로 나뉘어져 철저한 분업과 위계적 조직질서에 의해 작동된다. 이 편집국에서 이루어진 과학뉴스 생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담부서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황우석 사태를 취재하고 기사를 쓴 기자들 가운데는 ‘과학부’ 기자는 거의 없다. 적어도 서울에서 발간되는 종합일간지 기자들 가운데 과학부 기자가 하나도 없다. 신문사 편집국내에 과학부가 없기 때문이다.

일간지의 경우, 전적으로 과학만을 담당하는 기자들은 대개 한 두 명이다. 그들은 과학부가 아니라 산업부, 경제부, 사회부 등에 소속되어 있다. 의료·보건 분야를 담당하는 기자와 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기자

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도 다섯 명을 넘는 언론사는 몇 되지 않는다. 이번의 황우석 사태와 같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사회부, 경제부 등 다른 부서 소속 기자의 지원을 받는다. 다시 말해, 엄청난 양의 황우석 관련 기사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기자들은 평소에는 '과학'을 접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평소에는 사건·사고 취재와 산업계 취재에 정신없던 기자들이다.

과학담당 기자들은 그래서 늘 외롭다. 과학분야의 취재를 열심히 해서 능력을 인정 받는다고 '과학부장'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견과 경험을 나눠 줄 동료와 선배도 없다. 요즘 나노과학에서는 어떤 이슈가 논의되고 있는지, 성체줄기세포의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자 찾아나서야 한다. 사회부 사건기자처럼 각 지역의 경찰서를 나눠 맡는 동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 많은 선배가 시정캡으로 받쳐주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 과학부 기자만 40여명

우리와 비슷한 편집국 체제를 갖추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자. <아사히신문>의 도쿄 편집국에는 과학부에서 이름을 바꾼 '과학의료부'가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밑에 5개 팀이 구성되어 있다. '기초과학팀', '과학기술행정팀', '의료팀'과 큰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집되는 '긴급대응팀', 일요일의 별도지면을 위한 '일요be팀'이다. 여기에 30명의 기자가 소속되어 있다. 오사카 편집국에서는 추가로 10여 명이 과학분야의 취재를 담당하고 있다. 경쟁지인 <요미우리신문> 역시 비슷하다. 과학부가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며, 도쿄 편집국에 28명, 오사카에 11명의 기

자가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요미우리신문>의 경우, 워싱턴에 과학담당 특파원을 별도로 파견하여 미국의 과학뉴스를 취재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신문에서 과학면을 제외하고 과학기사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지면이 '국제면'이다. 국제부 기자가 외국 과학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보도한 외신을 번역해서 기사화하기 때문이다. 과학담당 특파원의 현지취재기사와 국제부 기자의 외신번역 기사의 차이는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종합일간지와 달리 우리 나라의 경제신문에는 과학기술부, 정보과학부 등의 이름을 한 취재부서들이 있다. 이 부서들은 주로 과학기술의 산업적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물리학, 화학, 우주과학 등 순수과학에 대한 취재와 기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정보통신 분야나 벤처기업들의 산업기술과 관련한 뉴스를 주로 취재한다는 점에서 종합일간지의 과학담당 부서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외국의 경제신문에 비해 현격한 규모의 차이는 마찬가지다. 우리 나라의 대표적 경제신문인 <매일경제>와 <한국경제>는 '과학기술부'를 두고 있는데, 부장을 포함하여 각각 5~6명의 기사를 두고 있다. 반면에,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신문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의 '과학기술부'는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취재인력과 조직에서의 양적인 차이는 전문영역의 확보나 전문성의 강화를 어렵게 하는 일차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내부경쟁력 떨어진 과학뉴스, 지면 축소로 이어져

과학취재 전담부서의 부재로 인한 더 큰

문제는 언론사 내부경쟁의 약화에 있다. 아무리 좋은 기사를 쓴다고 해도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뉴스와 경쟁해서 선택되지 않으면 지면에 실릴 수 없다. 즉, 언론사 내부 편집회의에서 과학뉴스를 책임지고 세일즈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과학담당 기자가 소속된 사회부, 산업부, 경제부 부장의 입장에서 과학뉴스는 부수적 기사거리다. 그것 말고도 더 중요한 사건기사, 경제·산업기사가 무수히 많다. 과학뉴스까지 신경 쓸 여력을 갖기 힘들다. 그러다 보면, 해당 부서의 지면에서 밀리기 쉽고, 다른 지면을 얻기 위해서는 담당기자가 직접 뛰어야 될 경우까지 생긴다.

애초부터 과학부가 편집부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1990년대초까지 만해도 신문사에는 과학부, 생활과학부, 과학기술부, 과학환경부 등의 이름으로 전담부서가 있었다. 그러던 것이 IMF를 맞아 신문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고강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과학부는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다. 이러한 조직과 인력의 축소는 과학면의 축소로 이어졌다. 종합일간지 중에는 매주 2면의 과학면을 배치하고 있는 <동아일보>를 제외하면, 모두 주당 1면이거나 별도의 과학면이 없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건강관련 지면은 매주 2면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 기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최근 독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웰빙열풍을 고려한 기사들로 일반적 의미의 과학기사와는 거리가 있다.

반면, <뉴욕타임즈>는 매주 화요일 '사이언스 타임즈'라는 제목으로 8면의 독립된 섹션을 발행한다. <아사히신문>의 경우 과학면을 석간에 매주 2면 배치하고 있으며, 일요일판에 별도로 5~6면의 과학기사를 실는다. <니혼게이지이신문> 역시 조건과

석간을 합해서 매주 3면의 과학면과 4면의 의료면을 신는다. 취재부서의 규모나 기사 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지면이 아니다. <뉴욕타임즈> 사이언스 타임즈 섹션의 작년 하반기 10주간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 기자 한 명이 작성한 기사 수는 평균 3.3건이었다. 그 중 22명은 한 건의 기사만을 작성했다. <뉴욕타임즈> 과학기자의 경우, 다양한 고용계약 형태로 이루어져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매주 과학면을 혼자서 채워야 하는 우리 나라의 기자들의 상황과는 큰 차이가 있다. 기자들이 자신의 전문분야를 확보하고 전문성에 바탕을 둔 심층취재가 가능한 기본적 조건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학담당 기자와 의료·보건담당 기자가 조직편제상 분리되어 있어 일상적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번 황우석 사태 보도에서 과학기자와 의학기자가 같이 바이라인을 단 기사가 상당수 있을 정도로 두 분야 기자들 사이의 협업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신문사에서는 서로 다른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라기보다 편집부 내부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로 출입처가 다르고 취재대상과 기사거리의 특성이 다르다고 여겨져 왔기 때문일 것이다. 의료·보건담당은 보건복지부, 식약청, 병원 등을 출입하며 일반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기사거리들을 다룬다. 반면, 과학담당은 과학기술부와 연구소를 대상으로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소재를 다룬다.

과학과 의료·보건 분야의 취재와 기사 작성 등에 협업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테면, 의학과 과학, 환경 분야 등을 묶어 하나의

독립된 취재부서를 구성하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지면배치나 인력구조 등을 감안할 때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과감히 시도해 볼직하다. 실제로 <아사히신문>의 경우, 부서명이 아예 '과학의료부'로 되어있고, 경제신문인 <니혼게이지신문>의 과학기술부에서도 의료분야에 대한 취재를 같이 담당하고 있다.

뉴스와 다큐멘터리 결합한 과학저널 프로그램

방송국에는 신문사의 편집국에 해당하는 보도국이 보도본부 산하에 있고 여기에 기자들이 소속되어 뉴스프로그램을 위한 취재와 제작을 담당한다. 그리고 교양·오락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제작본부가 있다. PD들은 바로 이곳에 소속되어 있다. 드라마, 퀴즈쇼, 오락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등이 모두 이곳에서 제작된다. 예전의 <카이스트>같은 드라마나 <사이언스21>같은 과학다큐멘터리 등은 모두 이 제작본부에서 만들어진다.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대한 의혹제기는 이들 제작본부의 PD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영롱이 탄생 때부터 황우석 교수를 지속적으로 취재해 온 과학기자들이 여럿있다. 그들 가운데에는 과학이나 의학을 전공한 기자도 있다. 기자들에 비해 표면적인 조건으로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PD들에 의해 의혹이 제기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기자의 취재와 PD의 취재는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기자저널리즘'과 'PD저널리즘'으로 구분해서 부르기도 한다.

무엇보다 기자들의 취재는 '출입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효율적인 정보수집과 취재를 위해 중요한 기관이나 단체·조

직을 정기적으로 드나드는 것이다. 기자들은 그 출입처별로 '출입기자단'이라는 것을 구성하기도 한다. 취재원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이해를 높이고 쉽게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구체적인 물증과 증언을 확보하지 않고서 선불리 의혹을 제기하기는 힘들다. 더구나 과학계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앞으로도 굉장한 뉴스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여겨지는 취재원에 맞서기는 더욱더 어려울 것이다. 또한, 기자 특히 과학기자의 입장에서 특정한 한 가지 사안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혼자서 과학분야 전체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에만 매달리다가는 다른 뉴스들은 모두 놓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 시간도 돈도 심리적 여유도 없는 것이다.

이에 비해,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PD들은 기자와 마찬가지로 취재를 하지만 출입처 같은 것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출입처의 취재원이나 경쟁사의 동료들과의 관계를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 또한, 하나의 사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될 뿐더러 일정한 제작비가 지원된다. 예컨대, <PD수첩>팀은 핵심연구원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바로 미국을 방문했지만, 기자들의 조건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PD수첩>에서 PD가 연구원을 상대로 일반인은 이해하기 힘든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며 연구원을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온다. 해당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을 통해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송뉴스는 짧은 시간내에 핵심적인 단편적 사실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시사보도 프로그램과 같은 저널형식의 프로그램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뉴스처럼 지나치게 압축적이고 딱딱하지 않고, 다큐멘터리와 달리 지루하지 않으면서 시의성 있는 소재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과학저널'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는다면 과학계에서도 최신의 동향들을 소개할 수 있고, 시청자들의 이해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보도본부에서 기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제작본부에서 PD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각기 다른 제작방식, 관점, 취재방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각기 다른 외형적 차이를 나타낼 것이고, 시청자들은 그것을 흥미롭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각 방송사들이 편성하고 있는 시사고발 심층취재 프로그램들이 제작주체에 따라 각기 다른 색깔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다.

BBC '지평선' 같은 정규 편성 프로그램 절실

또 한 가지 절실한 것은 과학관련 '정규(고정)편성' 프로그램이다. 최근 호평을 받은 몇몇 과학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특집프로그램이거나 비정기적으로 편성되는 프로그램들이다. 그러다 보니, 과학프로그램 제작의 경험과 역량이 축적되지 않고, 제작인력이 육성되지 않는다. 초기에는 다소 미흡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규편성 과학프로그램이 몇 년 이상 유지해갈 때 제작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고, 전문인력들이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표적 공영방송사인 영국의 BBC와 일본의 NHK의 사례는 눈여겨볼 만하다. BBC가 자랑하는 '지평선(Horizon)'이라는 과학다큐멘터리는 40년이 넘게 방영되고 있다. BBC는 '교양·교



육프로그램 제작본부' 산하에 '과학프로그램 제작팀'을 별도로 두고 있다. 여기에는 150여 명의 직원이 있는데, 이 가운데 60여 명이 5년 이상의 프로그램 제작경력을 가진 이공계 출신의 과학전문 프로듀서들이다. NHK의 경우, 과학프로그램 제작 조직은 '과학·의학반', '생활과학반', '자연·환경반'의 3개 부서로 편제되어 있다. 여기에는 부장급 책임프로듀서 11명을 포함해 60명의 제작프로듀서들이 소속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방송사들에는 별도의 과학프로그램 전문제작 조직이나 인력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우리 나라 언론의 과학보도는 IMF시기 이후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도 뒷걸음질 친 것처럼 보인다. 첫걸음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특히, 최근의 황우석 사태로 인해 과학보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만은 틀림없는 만큼 한 단계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언론사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정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일 것이다. 과학계 또한 가치 있는 뉴스를 생산하는 취재원으로서의 소임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SD**

MBC PD수첩 제작진 기자회견 : 2005년 12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MBC 경영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황우석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진위여부'에 관련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PD수첩 최승호 CP(우)와 한학수 PD가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제작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글쓴이는 서강대학교 화학과 졸업 후 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과학커뮤니케이션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